내달 26일 종합보고서 제출 후 해체…이후 대책 시급

오월 44주년 시대적 과제

〈2〉5·18조사위

개별 보고서 '부실' 평가 인정하며 사과 불구 오류 등 수정 난망

5·18재단 민간 보고서 추진…광주시·市의회도 대처방안 고심

지난 2019년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의 해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5·18조사위는 지난해 12월 공식 조사 활동을 종료했으며, 다음 달 26일 4년간의 활동이 담긴 종합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해체된다.

앞서 직권조사 17건에 대한 개별 조사보고서를 공개했으나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부실 조사'를 지적하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부실 조사 평가의 이유론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와 '암매장' 등 핵심 조사 사안에 대해 '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게 꼽힌다.

'군·경 피해' 관련 보고서엔 사법부의 판결보다 후퇴한 조사 결과가 담겼고, 두 개의 조사보고서에 실린 '권용운 일병' 사망에 대한 내용은 서로 충돌하기도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수정·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광주시의회,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 등도 여기에 뜻을 같이하며 5·18조사위를 압박했다.

결국 조사위는 지난달 '보고서 부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으나 종합보고서 작성·제출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수정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해체가 한달여 남은 가운데 조사 미흡과 오류 지적을 받은 개별보고서의 내용이 왜곡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어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사회에선 정부에 조사위 해체 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후속 대처 방안을 자체적으로 고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념재단은 민변, 광주시의회,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종합보고서가 공개되면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을 바탕으로 기관·단체들은 5·18조사위의 내용 오류를 바로잡는 민간 차원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기념재단은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접근이 제한되는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물로 남지 않고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광주시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 통과되면서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의 설립이 가능해진 광주시도 광주시의회와 함께 후속 대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군에 의한 헬기사격 사건 등 진상규명 ▲집단학살,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18조사위의 진상규명 불능, 조사결과 미흡 결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광주시 차원의 자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모인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개별 조사보고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여러 기관·단체들과 함께해 별도의 보고서를 마련, 왜곡되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등의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18조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종합보고서 내용을 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5·18기념재단, 왜곡·폄훼 게임 제작자 고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 혐의…2차 가해 게임 제작자도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폄훼한 게임을 만든 제작자 등을 고발한다.

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복지법 등 위반·모욕죄 등 혐의로 '그날의 광주' 게임 제작자와 이를 제보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차 가해 게임을 개발한 제작자를 각각 고발할 방침이다.

최근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한 제작자가 1980년 5월 항쟁 당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계엄군이 치열하게 총격전을 벌이는 게임을 개발했다.

또한 해당 게임 내 화폐를 이용해 아이템을 사면 북한군이 될 수 있거나 땅굴을 따라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기도 하는 등 대표적인 5·18 왜곡 사례인 '북한군 침투설'이 적용돼 왜곡 논란이 일었다.

이 게임을 접한 한 초등학생의 제보로 해당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 현재 플랫폼의 조치로 삭제됐는데 제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게임을 또 다른 사용자가 만들어 2차 가해 우려가 이어졌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 역사 왜곡이 어린이 대상 온라인 게임에도 침투했다"며 "두 게임 제작자의 신원을 밝혀 엄히 처벌, 우리 사회가 가진 건전한 자정 능력과 이를 믿는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과 가치가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檢,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회장 추가 기소

광주지역 계열사 '직접 경영' 확인

광주지검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지역 계열사를 직접 경영하며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박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근로자 251명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 총 114억원을 체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박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 다른 계열사 두 곳의 근로자 738명의 임금·퇴직금 388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구속기소된 상태다.

광주지검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지역 법인을 수사하면서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한 사실을 확인, 추가 기소했다. /안재영 기자

코로나19 시기 보조금 수십억 편취 40대 '중형'

징역 7년…고용 촉진 사업 허위 신청·퇴사 후 실업급여 타내기도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가 고용난 해소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7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 있지도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31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취 보조금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가 고용난 해소를 위해 진행한 각종 일자리 사업에서 지급됐던 것들로,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범행했다. 이들은 여러 사업자와 결탁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도 타냈는데, 나중에는 퇴사한 것처럼 속여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획적이고 부정수급 액수가 31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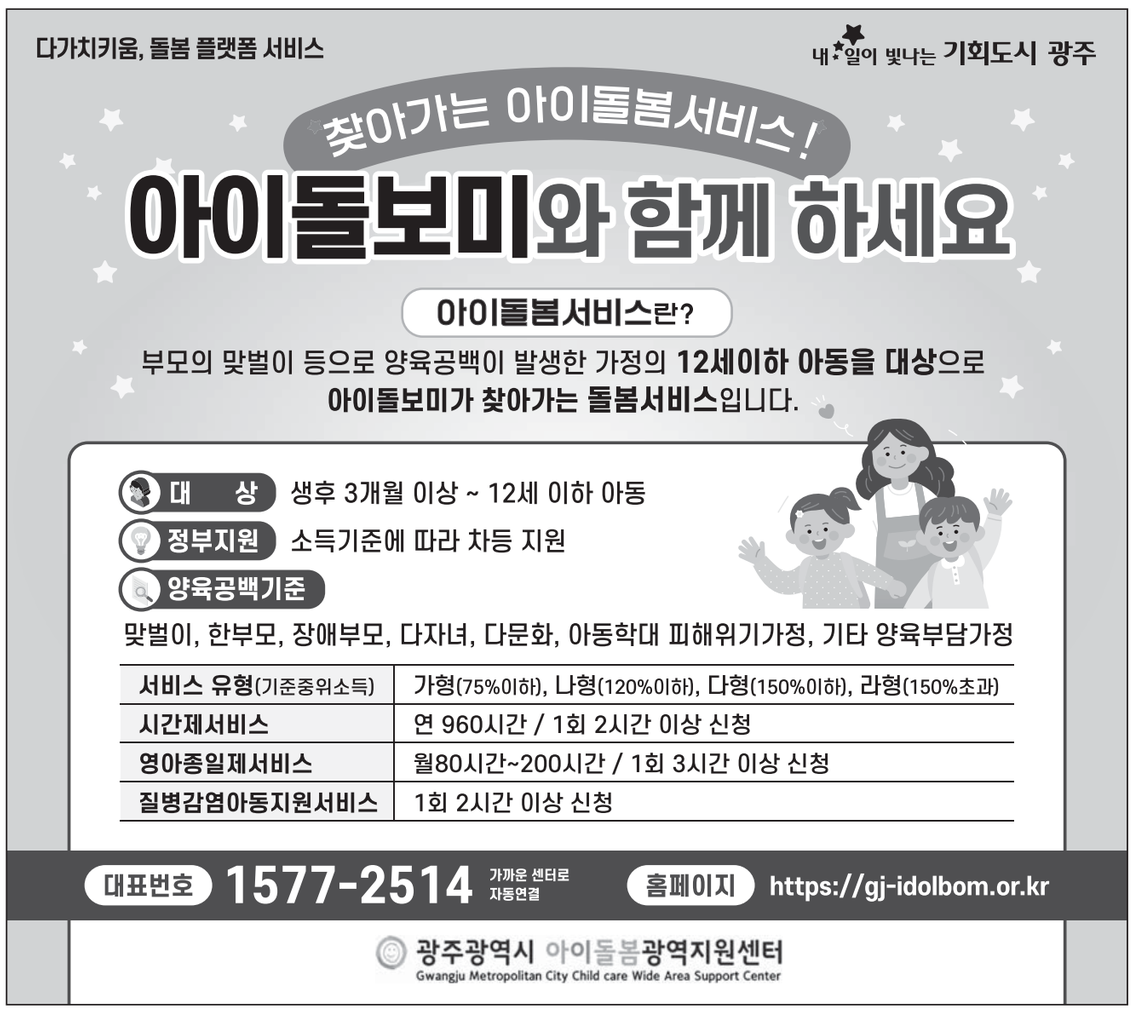
광주세관, 2천500억대 불법 환치기 일당 검거

해외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처분하는 방법으로 2천500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붙잡혔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7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무등록 외국환업무)로 한국인 1명과 중국인 2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받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총 2천500억여원의 외화를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환치기 범죄로 이들은 월평균 3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에서 의류나 화장품을 사가는 중국 업자가 물품 대금으로 쓸 원화를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국내 거래소 전자지갑을 개설해두고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때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ATM 기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환전소를 차려뒀으나 환전 영업은 하지 않고 현금화한 원화를 전해주는 장소로 사용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 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는 만큼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외환 범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